## 위기의 자동차산업

지난달 생산량 29만1971대 전년비 18.2% 감소···생산량도 8.4%↓ 5개 완성차 국내 판매 8.5% 하락···美 관세 불확실성에 불안감 고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생산 ·판매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트럼 프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먹구름이 걷히지 않 으면서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 다.

자동차산업이 고용·생산 등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달 생산량은 29만1971대로, 지난해 같은달(35만6749대)에 견줘 무려 18.2%나 줄었 다. 이는 직전 월인 8월보다도 1.5% 감소한 수치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생산량(289만 9556대)도 지난해 같은 기간(316만4888대)보다 8.4% 줄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124만1478대를 생산, 전년 동기(126만5736대) 대비 1.9% 줄었 고 기아차도 105만5000대를 생산하는 데 그쳐 전 년도 1~9월 생산량(117만1043대)보다 9.9% 감 소해다

한국GM도 1~9월 생산량이 33만30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 40만4687대에 비해 18.4% 줄었고 쌍용 차는 7.2%, 르노삼성은 19.4% 각각 감소했다.

판매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9월 한 달간 국내외 판매량은 총 67 만845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

업체별로는 르노삼성(1만4582대)이 44.3%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 현대차(38만4833대) 6.6% ▲ 기아차(23만3708대) 6.4% ▲한국GM (3만4816대) 13.5% ▲ 쌍용차(1만511대·반조립 제품(CKD) 제외) 20.2% 등으로 감소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에 더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대대적인 추가할인 행사를 하는 점도 이같은 위기 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할 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하면서 자동차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고용·생산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자동차산업 생산액이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44.6%(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액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2.4%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같은 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촌과 더불어 살아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2일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과 함께 광산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0명을 대 상으로 담양 황금마을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경제난 가중시키는 가계 빚

증가속도 세계 3위 ·원리금 상환비율 역대 최고 … 내수 ·경제 위축 우려

소득과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나 며 가계의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다른 국가와 견줘

서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 금상환비율)은 12.2%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사스해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 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 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과 비교해 미래 빚 상환 부 담이 크다는 뜻이다.

가계 부문의 DSR는 통계 작성 초기인 1999년~ 2000년엔 8~9%대였다가 서서히 상승, 2010년 말 12%대에 진입했다.

2013년 11%대로 다시 내려와 수준을 유지했으 나 2016년 1분기 11.2%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말 올해 1분기 DSR는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 다.

울해 1분기 DSR는 2011년 2~4분기 기독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 는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며 원리금은 커지지만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서다.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에 힘입어 가계신용 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서 떨어져 올해 1분기 8.0%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1%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보다 0.3% 찔끔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에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잔액 기준)는 1분기 3.46%로 2015년 3분기(3.46%)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세와 견줘서도 가파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기준 95.2%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년 상승 폭에선 43개국 가운데 3위였다.

가계 소득, 경제 성장세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는 소비를 짓눌러 내수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점 에서 우려를 낳는다. /연합뉴스

## 쓸 곳 없는 온누리전자상품권

광주 10곳 중 3곳만 이용 가능…점포당 실적 3만원 밑돌아

"있어도 써먹을 곳이 없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온누리전자상품권이 사용할 수있는 점포가 일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장점포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데다, 점포당 사용실적역시 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전자상품권을 사 용할 수 있는 시장 점포는 전국 22만123곳의 35.6%인 7만8361곳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전체 시장점포 6532곳 중 온누리전 자상품권을 취급하는 점포는 2007곳에 불과해 그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0.7%에 그쳤다. 전 남지역 역시 전체 시장점포 6914곳 중 가맹점은 34.8% 수준인 2407곳에 머물렀다.

온누리전자상품권은 중기부가 지난 2012년 전통 시장의 매출증대를 도입했다. 이후 2015년 10억 9000만원, 2016년 7억6000만원, 2017년 3억5000 만원 등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붙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홍보과 시장 점포들의 카드 단말 기 미비 등으로 온누리전자상품권의 가맹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광주에서는 올해 8월까지 온누리전자상품 권 이용금액이 5976만5040원으로 가맹점포 1곳당 2만9778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으며, 전남은 이보 다 낮은 2956만2910원으로 가맹점포 1곳당 1만 2282원 끌이었다.

가맹점포당 1만~3만원 꼴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애초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종이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금 융기관은 14곳이지만 전자상품권은 대구·부산·경 남·기업·우리·농협은행, 비씨카드 등 7곳에 불과한 것도 이용률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다.

위성곤 의원은 "카드단말기 지원 등 온누리전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 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

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 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

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 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 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 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 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 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